

 국토교통부	<h1>보 도 자 료</h1>		
	배포일시	2021. 2. 16(화) 총 18매(본문7, 참고11)	
담당 부서 기획담당관	담당 자	• 과장 김효정, 서기관 박정혁, 조민우, 사무관 최준녕, 최민석, 주무관 김원섭, 한현진 • ☎ (044) 201-3197, 3203, 3204	
보 도 일 시		2021년 2월 17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2.16(화) 행사 종료 이후 보도 가능	

2021년 정부 업무보고

「회복 · 포용 · 도약 대한민국 2021」

-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 -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 주택 공급과 주거 복지의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 ◆ 지방의 경쟁력 강화로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균형발전 구현
- ◆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등 국토교통 산업 혁신
- ◆ 교통안전, 건설안전 등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 (교통편의) 제천이 고향인 박씨는 최근 중앙선 복선화가 완료되고 KTX-이음이 운행되어 고향 방문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김포 신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천씨는 도시철도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이 1시간 이상 감소하였다. 앞으로 수도권에 GTX가 개통되면 수도권 전역이 1시간 내로 연결되어 광역교통 편의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 (도시재생) 경남 하동의 조씨는 쇠퇴한 고향을 보며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노후주택이 수리되고, 빈집은 마을회관 등으로 리모델링되어 동네가 깨끗하게 바뀌었다. 공동이용시설에는 마을식당, 게스트 하우스가 생겨 방문객도 늘었다. 마을이 활력을 찾아 만족스럽다

《 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 (균형발전) 수도권에 거주하던 정씨 부부는 세 남매를 자연 속에서 키우고 싶었으나 적당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다 지방에 주거 공간과 일자리, 생활 SOC가 결합된 주거 플랫폼이 공급되어 수준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되자 이주를 결정했다. 질 좋은 주택 뿐만 아니라 부부는 군에서 일자리를 알선해 준 덕분에 직장 걱정도 덜 수 있었다. 집 근처에서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이용하며 예전보다 높은 삶의 질도 누리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월 16일(화) 청와대-세종청사간 영상방식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1. 지난 4년간 정책 성과

- 국토교통부는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거 안정과 교통 서비스를 향상하여 국민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①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의 여건을 마련하였다.

-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지역 거점의 균형발전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도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의 기반이 되도록 지역 맞춤형 산단 공급 등을 추진하였다.

②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국토교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였다.

- 건설업역 개편, 모빌리티 혁신안 착수 등 국토교통 산업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근로시간·임금 보장 등 근로 여건을 개선하였다.
- 스마트시티·자율차·드론 등 미래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제도 기반 마련, 서비스의 실증·구현에 착수하였다.

③ 국민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였다.

-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하여 주거복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여 OECD 평균 수준(8%)의 재고율을 달성하였다. 세제·금융·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노력하였다.

④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였다.

- 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여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통행료 인하, 알뜰교통카드 등으로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휠체어 고속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다.

2. 2021년 주요 업무계획

① 주거 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 ¹⁾주택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는 한편, ²⁾주거플랫폼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뉴딜을 추진하고, ³⁾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거를 혁신한다.

① 먼저,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83.6만호(서울 32만호, 수도권 61.6만호) 공급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혁신한다.

*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 포함시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00만호 이상 공급 예정

② 삶, 일자리, 복지가 결합된 주거플랫폼을 통해 균형발전,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도록 주거뉴딜을 추진한다.

- 주택에 생활SOC, 사회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육아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여 균형발전을 지원하며, 제로에너지 주택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③ 분양주택, 임대주택 이외에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의 유형*을 상반기 중 재정립하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한다.

* 지분적립형 주택,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공유형 모기지 연계 등

□ 또한,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중형임대주택 등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에 착수하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등에 대해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주거복지를 질적으로 개선한다.

* (청년) 청년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시행 (고령자) 주택에 돌봄·요양서비스를 연계, (신혼부부) 육아특화설계 적용 등

○ 정확한 통계,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로 정책 신뢰성도 제고한다.

②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

□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

①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킨다.

- 이를 위하여 광역 지자체가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21.下)한다.
- **도심융합특구**(지방 광역시 5곳), **캠퍼스 혁신파크**(기존 3개소, 신규 추가), **노후 산단 대개조**(기존 5개소, 신규 5개소) 등으로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행복도시·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 (행복도시) 에너지, 스마트도시 등 특화도시 조성, (새만금) 그린산단 조성 등
- 지역 거점의 동력을 확산하기 위하여 **광역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특히 **광역철도**가 지방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광역철도 사업**을 발굴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②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등에 쾌적한 주거공간, 일자리, 생활 SOC가 연계된 **주거 플랫폼**을 공급하여 삶의 질을 제고한다.

- 이를 위해 농림부·해수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21.3~)한다.
- 또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의 **신규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도 본격 창출한다.
* 연내 40곳 준공, 생활 SOC 200개소, 공공임대주택 0.1만호 공급 등

③ 지방과 수도권의 개발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는 등 수도권이 향유하는 개발이익을 **지방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한다.

③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 코로나19 위기를 회복하고 선도형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혁신한다.

① 건설산업의 역량을 강화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한다.

- 시공에 편중되어 온 건설산업에 “계획~시공~유지·관리”의 쏠 단계를 아우르는 **PM(프로젝트 총괄관리)을 도입**하여 공공사업에 적용한다.
 - * 연내 건설기술진흥법에 PM의 개념을 도입하고, LH·철도공단 사업 등에 시범 적용
- 3차원 건축정보 모델 설계(BIM), 중고층 모듈러 기술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적용한다.
- 도시·교통·통신 등 여러 분야를 패키지로 묶어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도록 **범국가적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 임금직불제, 기능인 등급제 시행 등 건설업의 근로여건도 개선한다.
 - * (임금직불제) 적용 민간기업에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21.1), 직불제 2.0 마련('21.11) (기능인등급제) 경력·교육·이력 정보 관리 일원화('21.5),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21.10)

② 교통·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21.上)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사업화함으로써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한다.
 - 아울러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를 4월부터 본격 시행하며, 기존 택시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 비대면 경제 핵심인 물류산업은 유통·제조 기능이 복합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21.12, 사업계획 수립), **물류기술 R&D 착수** 등을 통해 스마트 산업으로 혁신한다.
 - **거래구조 선진화 방안 마련**('21.5) 등으로 종사자 보호도 추진한다.

□ 국토교통 분야의 한국판 뉴딜을 힘 있게 추진한다.

①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의 국민 체감을 높인다.

- 먼저, 스마트시티 사업을 통해 도시 공간의 스마트화를 촉진한다.
- 부산은 주거단지 입주를 개시('21.12)하고, 세종은 서비스 체험공간 조성을 완료('21.12)하는 등 국가시범도시의 성과를 가시화한다.
- 지역 주도로 특화도시를 조성('21.下, 사업지 선정)하는 신규 사업을 마련하고, 스마트 챌린지를 확대(18개 → 44개 도시)하여 우수한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한다.
- 또한 자율차 시범운영지구 운영(서울 등 6개 지역),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전국 구축(~'25년) 등으로 자율차 상용화 시대를 준비한다.
- 연내 도서 산간지역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하고,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드론 서비스 실증도 지속 추진한다.

② 국토교통 분야에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을 선도한다.

* 전체 탄소배출량 중 비중 : (건물) 약 24.6%, (수송) 약 13.5%

-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에너지 특화도시, 수소도시 등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 ('21년 그린리모델링) 공공건축물 1천여동, 공공임대주택 8만3천호

*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수원당수2(~'25년, 684천㎡)

* (수소도시) 울산, 안산, 전주·완주(금년 인프라 설치, '22년 조성 완료)

- 친환경 차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그린 모빌리티도 확대한다. 특히, 사업용 차량에 대한 수소연료 보조금 사업에 착수하며, '22년까지 주요 고속도로에 수소충전소 60기를 설치하고 수소교통 복합기지를 구축('21.11)하는 등 수소교통 기반을 본격 구축한다.

④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 교통 안전, 산업 안전, 자살 예방의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앞장서서 이행한다.

① 올해 OECD 평균 이상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

*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 ('20) 6.0명 → ('21년 목표) 4.8명(OECD 평균 5.6명)

** 교통사고 사망자 수 : ('16) 4,292명 → ('18) 3,781명 → ('20) 3,080명(잠정)

- 이를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전국에서 본격 시행하는 등 보행자, 화물차, 개인형 교통수단 등 취약요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②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의 사망자 수*를 전년대비 20% 이상 감축한다.

* 건설사고 사망자 수 : ('17) 506명 → ('18) 485명 → ('19) 428명 → ('20) 458명(잠정)

- 현장점검 확대(2,600→15,500개), 건설기계 검사제도 강화 등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찰평가에 사고유무를 반영하도록 발주방식을 개선하여 기업의 안전투자를 유도한다.

③ 그간 관심이 소홀했던 자살에 대해서도 예방 노력을 본격 시행한다. 공공주택의 소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주거복지사 배치 등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한다.

□ 국토교통부는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위 4가지 핵심과제를 완수하여 회복·포용·도약의 2021년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최준녕(☎ 044-201-320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걱정은 덜고 - 지역 활력은 더하고 + 혁신은 배가되는 ×

2021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1 주거 혁신으로 포용적 주거안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주도 3080+

- 공공+민간 협력
- 공공주도 방식 Fast track
-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 후속조치 추진절차

사업 제안 > 지구지침 > 주민동의 > 사업 확정 (2월~)

☞ 획기적 공급확대 ☞

주거뉴딜

돌봄·육아, 기후변화, 주거플랫폼, 일자리·복지, 균형발전, 중소도시 맞춤형 공급, 코로나19 위기극구 지원 등

☞ 사회문제 해결 ☞

수요맞춤형 부담가능한 주택

공공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의 주거사다리 역할에 한계 발생

수요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공공자가주택 유형을 재정립

도심 복합사업, 3기 신도시 등에 공급

☞ 수요자 선택권 확대 ☞

주거복지 강화

청년: 청년 직접 설계 '좋은 청년주택 만들기 프로젝트' (18-20 13만 → '21 5.4만 → -'22 22만호)

고령자: 무장애 설계, 돌봄-요양 서비스 강화 (18-20 3.3만 → '21 1.2만 → -'22 5만호)

신혼부부: 육아 특화설계 적용 (18-20 12만 → '21 6만 → -'22 25만호)

주거취약 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1인당) '20 26.6만 → '21 31만명

2 지방-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광역권 형성

광역권 형성

지역 혁신 거점

- 도심융합 특구 2곳 (대구·울주)
- 첨단스마트 혁신파크 3곳 (강릉대, 한남대, 한양(ERICA))
- 노동산단 개조 5곳 (산단개조 특성)

추가선정 (21.3~)

교통 인프라

- 지정기준 유연화
- 지자체 운영방안 마련
- 광역철도망 확충

지역 삶의 질 제고

주거플랫폼, 주거, 일자리, 복지, 청년, 고령, 장애인, 아동

- ☑ 주거플랫폼의 지역 맞춤형 공급
- ☑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주거여건 개선
- ☑ 투자선도지구 16곳, 지역발전투자협약 11곳 신속 추진

지방-수도권 상생발전

지방-수도권 결합사업 교차보전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이전 확대

[예시]

개발이익은 주택사업 + 공공주택사업

지방 ○○군: 단독주택단지, 농촌지역, 주택임대사업

동시추진: 구의역 광역, 부대시설 최소화

수도권 ○○지구: 공공주택단지, 도시지역 재개발사업, 주택 분양사업

사업소실 <-> 교차보전 <-> 사업이익

3 국토교통산업 혁신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건설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산업화

PM제도 도입



기술형입찰 확대(6.8%→10%)

스마트 산업화

BIM 설계 플랫폼



중고층 모듈러 시공 확대



교통 물류산업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플랫폼 운송사업 본격시행



K-스마트 물류

- ▶ 첨단 물류 인프라 확충**
 - e-카탄스 물류단지 3개소
 - 공유형 물류센터 11개소
- ▶ 디지털 물류 시범도시**
 - 스마트 물류 시범도시 조성
 - 첨단 물류시원스 적용 실증단지 조성
- ▶ 물류혁신 R&D**
 - 차세대공간 활용, 플랫폼
 - 공공물류 통합 연계 플랫폼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스마트시티



드론



인내 드론배송 상용화

자율차



-22년 Lv3 출시
-27년 Lv4 상용화

그린 뉴딜

건물 부문

-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확대
-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수송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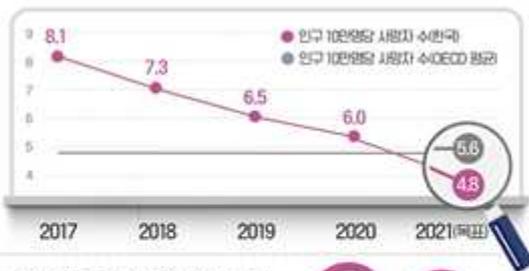
- 수소 교통복합기지 구축(21.11)
- 수소 충전소 확충



4 국민생명 지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안전속도 5030 전국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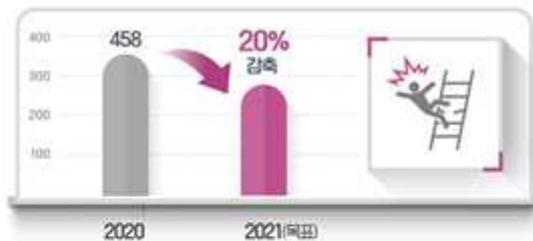
이륜차개인형이동수단 안전 강화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확대



건설현장 안전 강화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수



현장 점검 확대



입찰발주 방식 개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참고2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① 포용적 주거안정 기초를 흔들림 없이 추진			
▪ 공공주도 3080	주택정책과	장우철 과장 전인재 서기관	044-201-3317 3321
▪ 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경제과	김동익 과장 염지원 사무관	044-201-4920 4924
	도시재생정책과	황윤언 과장 박선영 사무관	044-201-4903 4907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택정책과	장우철 과장 전인재 서기관	044-201-3317 0000
▪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사업	도시재생정책과	황윤언 과장	044-201-4903
		박현근 서기관 박선영 사무관	4904 4907
▪ 소규모 정비사업	주택정비과	김기용 과장 박태진 사무관	044-201-3383 3384
	주거재생과	이지혜 과장 윤희근 사무관	044-201-4937 4941
▪ 비주택 리모델링·신축매입 약정	공공주택지원과	정수호 과장 서형우 사무관	044-201-4530 4533
▪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	공공택지기획과	양희관 과장 강한우 사무관	044-201-4505 4441
▪ 공공택지	공공택지기획과	양희관 과장 강한우 사무관	044-201-4505 4441
▪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	주택정비과	김기용 과장 박태진 사무관	044-201-3383 3384
▪ 소규모 재건축	주택정비과	김기용 과장 신용화 사무관	044-201-3383 3385
▪ 청약제도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 엄성열 사무관	044-201-3337 3342
	공공주택총괄과	성호철 과장 양승진 사무관	044-201-4539 4580
▪ 도심 내 임대주택	공공주택지원과	정수호 과장 서형우 사무관	044-201-4530 4533

주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공공임대	주거복지정책과	성호철 과장 홍일산 사무관	044-201-4539 4514
▪ 지역균형발전	국토정책과	정의경 과장 임정환 사무관	044-201-3646 4950
	주거복지정책과	김명준 과장 조은혜 사무관	044-201-4504 4506
▪ 그린 리모델링	녹색건축과	김유진 과장 김용수 사무관	044-201-3768 3769
	주거복지정책과	김명준 과장 조은혜 사무관	044-201-4504 4506
▪ 저출산·고령화 맞춤형주택	주거복지정책과	김명준 과장 조은혜 사무관	044-201-4504 4506
▪ 월세 금리인하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 김미리 사무관	044-201-3337 3341
▪ 최저주거기준	주거복지정책과	김명준 과장 박승연 사무관	044-201-4504 4506
▪ 주택 유형 개편	공공주택총괄과	성호철 과장 홍일산 사무관	044-201-4539 4514
▪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총괄과	성호철 과장 홍일산 사무관	044-201-4539 4514
▪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공주택지원과	정수호 과장 남궁부 사무관	044-201-4530 4532
▪ 공적주택(청년, 신혼, 고령자, 저소득)	주거복지정책과	김명준 과장 조은혜 사무관	044-201-4504 4506
▪ 쪽방촌 정비	공공택지개발과	김철기 과장 이태진 사무관	044-201-4442 4443
▪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토지정책과	정우진 과장 고경표 사무관	044-201-3398 3402
	분석총괄과	정승현 과장 신현성 사무관	044-201-3589 3590
▪ 중개보수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 양승길 사무관	044-201-3411 3413
▪ 전자계약 활성화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 최용관 사무관	044-201-3411 3415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주택가격 동향조사	주택정책과	장우철 과장 좌명한 사무관	044-201-3317 3324
▪ 공시제도	부동산평가과	신광호 과장 김동현 사무관	044-201-3422 3423
▪ 정비사업 3진아웃제	주택정비과	김기용 과장 박태진 사무관	044-201-3383 3384
▪ 공동주택 관리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 박종용 사무관	044-201-3364 3374
▪ 하자관리시스템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 민경철 사무관	044-201-3364 4897
▪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기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 육인수 사무관	044-201-3364 3369
▪ 임대차 신고제	주택정책과	장우철 과장 박정곤 사무관	044-201-3317 3314
▪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보증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 김지혜 사무관	044-201-3337 3338
▪ 임대사업자 관련 시스템	민간임대정책과	이두희 과장 장은석 사무관	044-201-4100 4476

② 국토균형발전 정책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 추구

▪ 광역권 계획	국토정책과	정의경 과장 임정환 사무관	044-201-3646 4950
▪ 도심융합특구	국토정책과	정의경 과장 김부병 사무관	044-201-3646 3650
▪ 캠퍼스 혁신파크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 임유현 사무관	044-201-3674 3663
▪ 노후산단 대개조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 임유현 사무관	044-201-3674 3663
▪ 혁신도시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이동민 과장 엄수연 사무관	044-201-4456 4458
▪ 행복도시	복합도시정책과	박건수 과장 최용제 사무관	044-201-3684 3686
▪ 새만금	복합도시정책과	박건수 과장 김영지 사무관	044-201-3684 3689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광역철도	철도투자개발과	김승범 과장 문기성 사무관	044-201-3988 4133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철도정책과	김헌정 과장 백승록 서기관	044-201-3938 3940
·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	광역교통정책과	손덕환 과장 천재민 서기관	044-201-5045 5046
· 철도망 고속화	철도건설과	김민태 과장 이상욱 사무관	044-201-3950 3961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 김창기 사무관	044-201-3875 3876
·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 나귀용 사무관	044-201-3875 3877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재정담당관실	김기대 과장 박성열 사무관	044-201-3238 3281
· 철도역사 개량	철도시설안전과	정선우 과장 최재기 사무관	044-201-4623 4625
· 고속도로 휴게소 인프라 조성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 최승필 사무관	044-201-3875 3874
· 지방 정주여건 개선	지역정책과	이성훈 과장 김민선 사무관	044-201-3662 3665
· 도시재생 뉴딜	도시재생정책과	황윤언 과장 박현근 서기관	044-201-4903 0000
· 투자선도지구	지역정책과	이성훈 과장 박영주 사무관	044-201-3662 3669
· 스마트시티	도시경제과	윤의식 과장 박선용 사무관	044-201-4845 4097
· 개발이익 교차보전	국토정책과	정의경 과장 임정환 사무관	044-201-3646 4950

③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하여 선도형 경제로 전환

· 수소도시	도시활력지원과	박용선 과장 송규상 사무관	044-201-3730 3733
· 제로에너지 건축	녹색건축과	김유진 과장 오한영 사무관	044-201-3768 4094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그린 리모델링	녹색건축과	김유진 과장 김용수 사무관	044-201-3768 3769
▪ 스마트 그린산단	산업입지정책과	김근오 과장 임유현 사무관	044-201-3674 3663
▪ 수소버스	버스정책과	나기호 과장 장형석 사무관	044-201-3823 3824
▪ 수소화물차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 신동기 사무관	044-201-3993 3997
▪ 수소교통복합기지	교통정책총괄과	박지홍 과장 박성호 사무관	044-201-3804 3788
▪ 수소충전소 구축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 최승필 사무관	044-201-3875 3874
▪ 전기충전기 구축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 최승필 사무관	044-201-3875 3874
▪ 태양광 발전(고속도로)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 최승필 사무관	044-201-3875 3874
▪ 태양광 발전(철도)	철도운영과	오수영 과장 고성우 사무관	044-201-3970 4636
▪ 미집행 공원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 윤창훈 사무관	044-201-3742 3749
▪ 용산공원	공원정책과	안세희 과장 김민정 사무관	02-2131-2030 2036
▪ 개발제한구역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 류경진 사무관	044-201-3742 3747
▪ 스마트시티	도시경제과	윤의식 과장 박선용 사무관	044-201-4845 4097
▪ 디지털 트윈	국토정보정책과	한동민 과장 주현희 사무관	044-201-3458 3466
▪ C-ITS	첨단자동차과	이창기 과장 김진우 사무관	044-201-3847 3934
▪ 자율주행자동차	첨단자동차과	이창기 과장 이기세 사무관	044-201-3847 3848
▪ 철도 SOC 디지털화	철도시설안전과	정선우 과장 김광수 사무관	044-201-4623 4624

주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도로 SOC 디지털화	디지털도로팀	이성민 팀장 장유진 사무관	044-201-4130 3928
▪ 공항 SOC 디지털화	항공보안과	이소영 과장 조상원 사무관	044-201-4232 4233
▪ 기업성장지원위원회	기업성장지원팀	오공명 팀장 김 혁 사무관	044-201-3252 3253
▪ 기업 금융 지원	기업성장지원팀	오공명 팀장 박지은 사무관	044-201-3252 3264
▪ 연구개발 지원	기업성장지원팀	오공명 팀장 박지은 사무관	044-201-3252 3264

④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국토교통 산업 혁신

▪ 건설산업 프로젝트 총괄관리	건설혁신과	박명주 과장 강성호 사무관	044-201-3561 3564
▪ BIM	기술정책과	장순재 과장 양화승 사무관	044-201-3549 3550
▪ 탈현장 시공	기술정책과	장순재 과장 양화승 사무관	044-201-3549 3550
▪ 건설산업 업역 폐지	공정건설추진팀	박진홍 팀장 정태현 사무관	044-201-3518 3541
▪ 패키지형 수주 지원	해외건설정책과	오성익 과장 정경인 서기관	044-201-3516 3517
▪ 스마트시티 수출, K-City 네트워크	도시정책과	정채교 과장 정정희 사무관	044-201-3706 3720
▪ PM 분야 공공-민간 동반 진출	해외건설정책과	오성익 과장 정경인 서기관	044-201-3516 3517
▪ PIS 정책펀드	해외건설정책과	오성익 과장 박상우 사무관	044-201-3516 4665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전담조직 설립	교통정책총괄과	박지홍 과장 김성환 서기관	044-201-3804 3792
▪ 운송플랫폼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 김민정 사무관	044-201-3817 4756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택시산업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 조은경 사무관	044-201-3817 4757
	물류정책과	김배성 과장 백병성 사무관	044-201-3993 3996
▪ 물류산업 첨단화	첨단물류과	오송천 과장 강윤진 사무관	044-201-4006 4013
	상황총괄대응과	이창훈 과장 황규오 사무관	044-201-4152 4153
▪ 철도산업 R&D	철도운영안전과	송시화 과장 이건준 사무관	044-201-4611 4620
	철도정책과	김헌정 과장 윤상원 사무관	044-201-3938 3944
▪ 자동차 튜닝, 인증대체부품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 김영건 사무관	044-201-3835 3840
▪ 항공산업 재도약 등	항공정책과	이정희 과장 우종하 서기관	044-201-4204 4181
	항공산업과	허경민 과장 신우철 사무관	044-201-4219 4223
▪ 트래블 버블·인바운드 관광	국제항공과	김홍락 과장 이호준 사무관	044-201-4207 4211
▪ 드론 및 UAM	첨단항공과	문석준 과장 김정한 사무관	044-201-4307 4253
	미래드론 교통담당관	나진항 과장 서정석 사무관	044-201-4197 4198
▪ 임금직불제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 김종욱 사무관	044-201-3504 4597
▪ 적정임금제	건설정책과	주종완 과장 김종욱 사무관	044-201-3504 4597
▪ 기능인등급제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 나은종 사무관	044-201-3538 3539
▪ 하도급 관리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 김학원 서기관	044-201-3538 3509
▪ 버스 지입관행 개선	버스정책과	나기호 과장 양찬윤 서기관	044-201-3823 3832
▪ 노선버스 주52시간	버스정책과	나기호 과장 양찬윤 서기관	044-201-3823 3832
▪ 택시기사 처우개선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 조은경 사무관	044-201-3817 4757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택배기사 사회안전망	상황총괄대응과	이창훈 과장 황규오 사무관	044-201-4152 4153

5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환경 조성

· 보행자 안전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 이정식 사무관	044-201-3872 3863
· 도로 결빙 예방	도로관리과	나웅진 과장 김대곤 사무관	044-201-3909 3911
· 화물차 안전	물류산업과	이진철 과장 이양구 사무관	044-201-4016 4018
	도로시설안전과	강성습 과장 김종현 주무관	044-201-3927 3931
· 이륜차 생애주기 맞춤형 관리	자동차운영보험	이중기 과장 송우영 사무관	044-201-3855 3856
· 개인형 이동수단	모빌리티정책과	김동현 과장 홍예표 사무관	044-201-3817 3820
· 건설 현장 안전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 안일찬 사무관	044-201-3573 3562
· 건설기계 관리	건설산업과	김광림 과장 박문신 사무관	044-201-3538 4588
· 철도 현장 안전	철도안전정책과	임종일 과장 김도한 사무관	044-201-4600 4602
	철도시설안전과	정선우 과장 최재기 사무관	044-201-4623 4625
· 도로 현장 안전	도로건설과	이정기 과장 김강문 사무관	044-201-3888 3891
· 시설물 안전	시설안전과	김태곤 과장 심보경 사무관	044-201-4598 3587
· 건축물 안전	건축안전과	오진수 과장 최민중 사무관	044-201-4987 4989
· 공간구조 특화설계	공공택지관리과	김은정 과장 박장근 사무관	044-201-4522 4524
·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역할 강화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 최예명 사무관	044-201-3364 3372
· 공항 방역	항공정책과	이정희 과장 김 울 사무관	044-201-0000 0000
· 철도 방역	철도운영과	오수영 과장 고성우 사무관	044-201-3970 4636

주요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 고속도로 방역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 최승필 사무관	044-201-3875 3874
▪ 수도권 광역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팀	장창석 팀장 박정란 사무관	044-201-3964 3983
▪ 광역버스 증차	광역버스과	박문수 과장 박선동 사무관	044-201-5065 5069
▪ 전기버스	광역버스과	박문수 과장 박선동 사무관	044-201-5065 5069
▪ 프리미엄 버스	광역버스과	박문수 과장 박선동 사무관	044-201-5065 5069
▪ 대도시권 간선도로	도로정책과	이상헌 과장 나귀용 사무관	044-201-3875 3877
	도로투자지원과	박병석 과장 천지민 사무관	044-201-3897 3898
▪ BTX	간선급행 버스체계과	윤성진 과장 조태용 사무관	044-201-5115 5122
▪ S-BRT	간선급행 버스체계과	윤성진 과장 정정균 사무관	044-201-5115 5117
▪ 트램	광역시설운영과	이우제 과장 홍철 서기관	044-201-5100 5102
▪ 환승센터	광역환승시설과	이경재 과장 양익준 사무관	044-201-5130 5134
▪ 광역알뜰카드	광역교통요금과	장구중 과장 유찬호 사무관	044-201-5080 5082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도로투자지원과	박병석 과장 김병철 사무관	044-201-3897 3906
▪ 준공영제	광역버스과	박문수 과장 박선동 사무관	044-201-5065 5069
▪ 저상버스, 휠체어 탑승버스	교통안전복지과	윤영중 과장 김교준 사무관	044-201-3872 3868
▪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버스정책과	나기호 과장 윤주석 사무관	044-201-3823 3826